

#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문(안)

의안  
번호

291

제안년월일 : 1998. 1. 2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1. 주 문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구를 선거단위로한 중선거구제 채택을 統合市(충주·제천)에는  $1 + 1 = 2$ 의 개념도입 및 선거구제 조정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내무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개선(안)의 인구비례 형평성의 문제점과
-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과 統合市の 불이익이 없도록  $1+1=2$ 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을 건의.

## 3. 건의기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각정당정책위의장

##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문(안)

평소 국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각정당정책위의장)님!

지금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만큼 국가적으로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지혜와 슬기로 극복하여 제2의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좌절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한 2류 국민으로 살게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21세기 일류국가를 목표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도민의 복지향상을 추구하여야하는 우리의 기본임무를 보다

충실히,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어도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에 대한 재조정”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각정당정책위의장)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란, 지역발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지방은 지역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과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지방이 할 수 있게 되면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는 지역발전의 속도도 그 만큼 앞당겨 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의 중앙정부는 과거와 같이 지방정부에 지시하고 군림하는 상위기관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조화를 추구하는 조정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외에도 집행부의 정책에 대하여 그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대안의 제시등 도민을 위하여 무한한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  
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 보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구를 선거단위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되, 인구 30만 초과시 매 20만명당 1명을 추가하는 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도·농統合市の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1+1=2의 개념도입을 건의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처음 구상하고 검토할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都農)의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전에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통합시가 출범한지 어언 3년이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통합당시 제기된 「불이익배제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統合市에 대하여는 1+1=2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비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시군구당 30만명을 기준으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게 되면 인구가 4만명인 선거구와 30만명 미만인 선거구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의 대표이면서 민의의 대변자인 도의회의원은 도정의 발전과 조화를 추구하며 조정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각정당정책위의장)님!

이제 우리는 모두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50년동안 지속되어온 해묵은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살을 돋게하여 IMF 통제에서 벗어나고,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월 21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